

전주시,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 반영 총력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조성·산업경제·광역망 구축 등 주요사업 부처 설득·정치권 공조 전략적 대응

전주시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정부의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및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예산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예산인 1조9059억 이상의 액수를 초과하는 전주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 부처단계에서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초부터 기재부를 비롯한 사업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시는 부처 예산 편성이 완료되는 오는 5월 말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가장 공을 들이는 국가예산 주요사업은 후백제 역사문화의 연구·

조사·보존·정비·활용을 위한 거점 공간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꼽을 수 있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은 전주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미래관광자원을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왕의 공원 프로젝트'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후백제와 조선을 아우르는 천년역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왕의 공원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전주 고도 지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고도 외에도 추가로 고도를 지정해 보존·육성할 수 있게 된 만큼, 관련 부처를 상대로 고도 지정 및 국비확보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설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강한 경제도시 구현

을 위해 드론 최첨단 인프라 및 시스템을 조성하는 '드론 핵심기술 숲(전)주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 제품생산, 인증에 이르는 드론기업 성장 인프라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시는 △미래 수소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 저장용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극저온 액체-고압기체 융합형 수소저장 원천기술 개발'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고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시는 천년미래·광역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대규모 SOC 사업인 △전주 외곽순환도로 우아~신리 연

결사업' △'지방도 702호선 국도승격' 등도 국가계획에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구)금암고 일원 도시재생' △'전주시 청 일원 생활환경 종합정비' 등 모두가 누리는 복지 시스템 구축 및 재난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최악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대변혁을 이끌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부처 집중방문과 정치적 공조 대응을 통해 최대한 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부처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기재부 심의, 국회단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간부공무원 전체가 합심해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제38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 부스분야에서 최우수 '부스운영상'을 수상했다.

국제관광박람회 부스운영 '최우수'

전주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박람회 참가... 부스분야 수상

전주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제38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 5개 분야 중 부스분야에서 최우수 '부스운영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주)코트파가 주최한 이번 국제관광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관광박람회로, 40여 개 국가의 300여 개 기관·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500여 개 부스 규모로 진행됐다. 방문객은 5만2천여명이다. 한편, 부스(booth)란 칸막이 형태로 된 공간을 말하며 행사가 있을 때 그안에 각자의 콘텐츠를 설치하여 보여주는 것을 일컫는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주시관광과, 덕진공원 등의 전주 주요 여행명소와 전주에서 열리는 대표 축제를 알리고, 수도

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와 여객사와의 협의를 통해 전주 여행상품을 기획 판매하도록 협의했다. 특히 '비즈니스(Biz Jeonju)' SNS 채널 홍보를 위한 팔로워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Biz Jeonju)'란 전주시 관광안내 대표 인스타그램이다. 이번 팔로워 이벤트는 팔로워로 등록할 경우 전주부채와 비빔면 등을 제공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 이어 오는 10월 부산국제관광박람회 등 전국 각 권역별로 개최 예정인 주요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 역사도심지구 '최대 개발 규모제한 규제' 대폭 완화

원도심 노후 상권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앞으로는 전주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역사도심지구에서 대규모 건축과 자유로운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주시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원도심 주민들의 토지 이용 불편을 야기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최대 개발 규모제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시는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의 토지 개발 시 공간 최대 개발 규모를 제한했던 것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역사도심지구 중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풍패지관(전주객사), 전라감영, 전주부성 복원·풍문·서문 및 성곽 복원 예정지 등 6곳(5만3000㎡)을 제외하고 최대 개발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도심의 노후화된 건축물 밀집 지역의 열악한 도로 환경개선과 부족했던 주차공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지구단위계획 상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됐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던 차 없는 거리 구역도 해제됐다.



역사도심지구

또 차 없는 거리 안에서 특례로 완화하고 있던 대지의 도로 폭 확보 의무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특례도 폐지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앞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노후화된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개발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토지 개발이 필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및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동과 풍

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고,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8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하지만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신도시로 이전한 중심상권으로 인해 흉물로 방치된 유휴부지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원도심이 점차 활력을 잃어감에 따라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개발 규모 제한 완화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배회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그동안 역사도심지구 안에서 획일적으로 제한됐던 최대 개발 규모를 해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역사관광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역사문화자원 복원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한 만큼 자율적 토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된 총 3만7,93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전주시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전주시청 세정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월세로 임대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효자동 4호(전주대 인근), 금암동 3호(전북대 인근), 중노송동 1호(서노송동에울촌 인근) 등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주거 형태는 1인 단독거주형 7호와 3인 공동거주형 1호 등 2가지로, 모든 주택에는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방고와 세탁기,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구비돼 있다.

입주 자격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인 미혼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순위별 입주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 1순위로

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 550만 원, 3인 671만 원)인 가구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02만 원)인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조건은 주택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임대보증금은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에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청년정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8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